
 ◆ 政府施策 ◆

'96 공기본 기술개발 신규사업자 확정

-통산부, 전기·전자 83개등 포함-

정부는 공업기본 기술개발 신규 과제로 총 2백82개 과제를 선정, 이들 과제 개발에 총 2천2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산업부는 산업기술정책 연구소가 국내 기술개발 업체들이 공통 애로기술 개발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 신규 과제로 신청한 총7백40개 과제 중 부적격 과제를 제외한 6백56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파급효과 등을 조합 심사한 결과 이 중 2백82개 과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공통애로 기술개발 과제로 △전자·전기분야 83개 △기계·자동화분야 44개 △자유과제 61개 등 2백69개 과제와 13개 국제공동 연구개발 과제로 돼 있다.

통신부는 올 신규개발 과제로 선정된 이들 2백82개 과제에 대해선 총 2천2백억원의 공업기본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 중 분야별 주요 개발과제로는 전자·전기분야에서 △PC용 디지털 음성·데이터 동시 송수신(DSVD) 모뎀칩 등 반도체 5건 △ICD용 액정기술 개발 등 평판 디스플레이 3건 △저 임피던스용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등 전자부품 및 재료 10건 △의료영상 신호처리시스템 등 영상기기 3건 △다차원 음장평기 및 재현 등 음향기기 2건 △중전기기 8건 △통신기기 14건 △컴퓨터 주변기기 1건 △멀티미디어 9건 △의료기기 6건 △계측기기 8건 등으로 돼 있다.

또 기계 및 자동화 부문은 △고정밀 CNC 내·외경 동시연삭기 등 공작기계 4건 △자동화 6건 △동자 6건 등이다.

통산부는 이번 신규과제 선정은 신청과제 총 7백40건 중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업체 스스로 포기한 경우를 제외한 총 6백56건을 대상으로 관련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에 대한 과제당 평균 정부지원 규모는 전년에 비해 24% 증가한 1억2천만원 정도이나 전기·전기분야는 11% 증가한 1억3천3백 만원으로 나타났다.

■ 공동핵심 기술개발 사업 과제(중전기 분야)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연구비(천원)
진단 기능 내장형 자동화 개폐기 개발	한국전기연구소	90,940
회전기기 온라인 이상 진단시스템 개발	현대정보기술(주)	60,000
AI 및 RMS를 이용한 SCADA시스템 개발	(주)명신정보시스템	102,747
전문가용 전력 관리시스템	덕산메카시스(주)	75,331
72.5KV 20kA 전철용 GIS 차단부 개발	한국전기연구소	163,666
High Speed 직류차단기 개발	영신전기공업(주)	124,004
직류차단기 개발	일진전기공업(주)	110,992
ZVZCS방식을 이용한 고효용, 고성능 통신용 정류기개발	한국전기연구소	109,273
저전압 대전류 고주파 DC 전원장치 개발	한국전기연구소	90,151

'96 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개정공고

-통산부, 120억원 증액 지원-

통상산업부는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 유통 등 산업기반의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산업기반기금의 '96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운용규모 4,314억원에서 120억원 증액된 4,434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공고를 개정하였다.

산업기반기금은 신발, 섬유, 생활용품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산업과 금형, 용접, 센서 등 우리 산업의 공통 취약업종에 대한 시설개체자금 및 디자인, 자기상표개발을 지원하는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사업", 유통업체의 정보화, 공동집배송단지, 공동창고, 물류표준화를 위한 "유통 합리화사업", 수출 및 수입대체상품 제조업체의 공장 신·증축비 및 중소기업제품 설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기반 조성사업"을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금번 개정된 공고내용은 '96상반기 중 지원실적 및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 96년경 운용계획내용

(단위 : 백만원)

품 목	96년계획(A)	변경(B)	증감(A-B)
생산성향상및 고부가가치화	73,000	85,000	12,000
-생산성 향상	40,000	39,000	△1,000
· 신발	10,000	6,000	△4,000
· 직물·편직·봉제	20,000	20,000	-
· 금형	2,000	4,000	2,000
· 소형가전	500	1,500	1,000
· 생활용품	500	500	-
· CALS체계도입 및 구축	3,000	3,000	-
· 환경설비	4,000	4,000	-
-산업공해시설개체	28,000	28,000	-
· 염색	10,000	10,000	-
· 염색공단	3,000	3,000	-
· 환경설비	8,000	8,000	-
· 피혁	5,000	5,000	-
· 도금	2,000	2,000	-
-고부가가치화	5,000	18,000	13,000
			(패션50억, 조 명기40억, 신발40억)
유통합리화	43,400	43,400	-
-유통정보화	2,000	4,000	2,000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29,000	24,800	△4,400
-협동화지원	3,600	8,000	4,400
-물류표준화	8,600	6,600	△2,000
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	315,000	315,000	-
-설비투자	230,000	23,000	-
-제품구매	85,000	85,000	-
계	431,400	443,400	12,000

산업체 義務雇用人員 감축 -191개規制사항 내년부터 改善-

현재 43만명에 달하는 산업체의 법정 의무고용인원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3분의 1 이상 감축된다.

설비투자 프로젝트당 국산기계를 50% 이상 구입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기계구입용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상업차관을 도입하거나 외화증권을 발행, 해외의 저금리의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소기업, 민자유치 제1종시설사업자,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한해 허용되는 첨단 기술산업용 시설재 수입을 위한 상업차관의 도입이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업에게도 허용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협회에게 위임·위탁하고 있는 각종의 규제업무중 191건이 금년말까지 관련법령 또는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폐지 또는 개선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안전이나 환경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산업보건의 영양사 등 13개 분야의 산업체 의무고용제도를 산업체 자율적인 고용제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관리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 및 환경관련 14개 분야의 법정고용의무인원을 축소 하고 의무고용면제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체에 고용된 기존 의무고용인원들에 대해서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이 시행될 경우 현재 43만명으로 추산되는 의무고용인원의 약 29%인 12만5천명이 자율고용인원으로 전환되고 안전분야에 대한 산업체의 고용부담이 완화, 장기적으로 의무고용인원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비투자 프로젝트당 50% 이상(가액기준)을 국산기계(국산화율 50%이상)로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20억달러(도입액기준)의 범위내에서 상업차관 도입이나 외화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공·전자 등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소요되는 자금의 70% 범위까지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도입한도를 10억달러(중소기업 도입분 포함)로 제한키로 했다.

원산지 事前判定制 도입추진 -통산부, 原產地制度개선방안 내년7월 시행목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원산지확인과 관련한 부품가격 리스트 제출의무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대폭 축소되고 표시요건이 구체적으로 지정되는 한편 수입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원산지 사전판정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빠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산부는 우선 그동안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왔던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원산지확인에 따른 부품가격리스트 제출을 폐지하고 부가가치내역 신고서로 대체해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되 허위신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부품가격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축소와 관련해서는 현행 농산물 188개, 공산품 490개 등 모두 678개에 달하는 표시품목을 570여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축소와 관련 원자재·자본재 등의 물품과 수입실적이 미미해 원산지표시의 실익이 거의 없는 품목을 1차 대상으로 대상품목 축소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산부는 또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입자가 물품 수입전에 증빙서류를 제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주는 원산지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산부의 이번 원산지제도 개선작업은 최근 OECD에서의 한국 무역정책 검토 및 WTO에서의 한국 무역정책 검토회의 등에서 미국·일본·스위스 등이 우리 원산지제도의 투명성이 낮은 점을 들어 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OECD가입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내년 中企기술개발支援 강화 — 科技處, 병역특례연구기관 指定要件 완화 —

과학기술처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키로 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처는 이번 세부추진계획에서 우선 전체기업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종합기술금융을 통한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조 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의 관행이나 담보 위주의 대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 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300억원을 확보, 한국종합기술금융을 통해 내달부터 1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국가연구과제 참여 중소기업연구비 지원도 올해 1306억원에서 내년에는 140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연리 6-7%,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소요연구비의 80%까지 지원키로 했다.

과기처는 또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Brain Pool)으로 유치되는 첨단분야 기술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70%로 확대하고 대상인력의 자격도 박사학위 소지자로부터 5년이상 경험자로 완화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해 나가고 우수기술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들의 신기술사업화 촉진체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사업화 종합지원기관을 설립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학·연 협력강화,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적재산권 심사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변전시설의 전원개발사업 49건 승인

—통산부, 3년간 6,600억원 투자—

통상산업부는 최근 재정경제원 등 11개 중앙부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청한 765kV 신대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9개 전원개발사업을 승인하였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원개발사업은 대부분 공업단지과 신시가지 조성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지역까지 수송하는 송변전시설사업으로서 약 3년간 시행하게 되며 이에 투자되는 건설비는 모두 약 6,600억원이다.

특히 이들 사업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설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운용중에 있는 계통중 최고전압인 345kV 급에 비해 송전능력이 4배로 증가하고 송전중 전력손실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분야에서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앞으로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력공급의 안정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I.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 | |
|----------------------|-----------------------------|
| 1. 154kV 직동 변전소 건설사업 | 10. 154kV 상정 변전소 건설사업 |
| 2. 154kV 목내 변전소 건설사업 | 11. 154kV 설성 변전소 건설사업 |
| 3. 154kV 발안 변전소 건설사업 | 12. 345kV 신여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 4. 154kV 군위 변전소 건설사업 | 13. 345kV 영흥도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
| 5. 154kV 이현 변전소 건설사업 | 14. 345kV 울진-신대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
| 6. 154kV 안심 변전소 건설사업 | 15. 345kV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
| 7. 154kV 계양 변전소 건설사업 | 16. 345kV 신가평-의정보 송전선로 건설사업 |
| 8. 154kV 외동 변전소 건설사업 | 17. 345kV 신온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 9. 154kV 조암 변전소 건설사업 | 18. 345kV 신안성-신용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
| | 19. 345kV 하동-의령 전선로 건설사업 |

- 20. 345kV 신화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21. 345kV 산청-의령 송전선로 건설사업
 - 22. 345kV 신시흥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 23. 154kV 성주-금릉 송전선로 건설사업
 - 24. 154kV 덕소-팔당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 25. 154kV 신포항-상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 26. 154kV 사강-대부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 27. 154kV 의령-이현 송전선로 건설사업
 - 28. 154kV 외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29. 154kV 덕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30. 154kV 북이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31. 154kV 삼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32. 154kV 수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33. 154kV 전의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34. 154kV 효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35. 154kV 서순천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36. 154kV 신용인-여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 37. 154kV 광주-성현 송전선로 건설사업
 - 38. 154kV 울주-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 39. 154kV 용담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 40. 154kV 대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41. 154kV 조치원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42. 154kV 승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43. 154kV 소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44. 154kV 설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45. 154kV 송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46. 154kV 화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II.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 47. 345kV 신시흥변전소 변경 건설사업
 - 48. 765kV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변경 건설사업
 - 49. 154kV 발안-오산 송전선로 변경 건설사업

쓰는만큼 환경파괴 아끼만큼 환경보호